韓國經濟의 高度成長, 相對的 窮乏化 및 隷屬化論에 대한 一考(1)

李 承 勳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 가운데 극단적인 것으로는 예속경제화론과 상대적 궁핍화론 등 두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표된 통계자료를 정리분석하여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한 경험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한국경제가 비록 자본과 기술 그리고 원자재와 제품판로 등을 모두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동안 투자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왔고, 기술력도 발전시켜 왔으며, 또한 외자가 한국으로부터 특별히 잉여를 더 많이 거두어 갔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예속화의 주장을 뒷받침할 경험적 근거는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GNP, 임금 및 농가소득수준의 시계열적 추세를 보면 상대적 궁핍화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불균등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주장할 만한 경험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1. 머 리 말

1970년과 1990년을 비교하면 한국경제의 驚異的 成長의 구체적 면모를 그대로 느끼게 된다. 국민총생산은 1985년도의 불변가격으로 25조원(70년)의 수준에서 130조 7천억원(90년)으로 5.2배로 신장하였고, 1인당 실질 GNP는 같은 기간 동안 76만 8천원에서 304만 6천원으로 4.0배로 신장하였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의 실질경제성장률도 연평균 8.7%로서 서구의 선진국들이 산업혁명에 성공한 이후 지속해 온 연평균성장률 3.5%를 크게 앞지른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19세기말에 확정된 이후 변하지 않고 있는 선진국권에 1세기가 지난 오늘에 한국과 대만 등 후진국들이 과연 새롭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제가 그 성장과정에서 외자와 외국기술에 크게 의존하여 왔고, 자원과 원자재는 물론 생산품의 판매시장까지 해외에 크게 의존해 오고 있는 데 반하여 최근 들어 통상과 기술문제에서 선진국들의 견제가 극심해지고 있는 점을 들어 앞

(1) 이 연구는 1989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대우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으로의 成長展望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견해 가운데 극단적인 것은 한국의 경제발전이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제약된 틀 이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결과 얻어진 잉여의 대부분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그 동안 한국경제가 성취해 온 고도성장은 단순한 양적 확대일 뿐이고 몇몇 재벌기업주들을 제외하면 한국인으로서 성장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누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류의 주장들은 한국경제가 양적 확대를 이루는 과정에서 선진국경제에 강하게 隷屬化되는 길을 걸어 왔다고 하는 공통된 주장을 펴고 있다[이대근(1985) 참조].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대한 또 한 가지의 비판은 성장의 성과가 일부에게만 집중적으로 분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체 국민 가운데 상류계층에 속한 일부 사람들만이 더 많은 잉여를 누리고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서민대중은 성장과실의 분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됨으로써, 비록 전반적인 국민생활이 경제성장의 결과로 크게 향상되였다고는 하나 서민대중은 상대적으로 더욱 窮乏化되는 길을 걸어 왔다는 것이다[박현채(1985) 참조].

이밖에도 한국경제의 현실에 대해서는 내실을 기하지 못한채 양적 확대에 급급한 외연적 성장으로만 일관해 왔다든가 기술향상을 꾀하기보다는 안일하게도 저렴한 임금에만 의존하여 왔다든가 하는 등의 비판이 여러 시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은 종래의 성장전략이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크게 수정되어야 함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성과 자체는 인정하고 들어간다. 이에 반하여 앞의 두 가지 비판은 경제성장의 의미 자체를 부인하는 극단적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30여년간 이루어진 한국경제의 변천과정을 성장이 아니라 예속화와 상대적 궁핍화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極端的 批判論의 기본시각인 것이다. 본 연구는 '예속화'와 '상대적 궁핍화'의 증거를 모색 검토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극단적 비판론의 現實的 妥當性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隷屬化의 問題

한국경제의 對外依存性은 여러 면에서 들어난다. 1985년도말 현재 도입된 외채의 총액은 467억 2천 9백만달러, 외국인직접투자까지 포함한 순외자의 규모는 204억 2천 2백만달러에 이를 정도로 외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초기반 및 생산기술 또한 선진국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같은 해 수입의존도는 34.7%, 수출의존도는 33.8%로서 輸出入依存度가 도합 68.5%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원 및 원자재의 공급선과 생산

제품의 판로를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들어서 한국경제가 선진자본주의 경제에 예속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외의존적 특성이 곧바로 隷屬經濟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같은 해 네델란드의 수출입의존도는 105.8%에 이르고 있지만 네델란드경제를 다른 나라에 예속된 경제라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축적된 자본과 기술이 크게 부족한 후진국이 정책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본과 기술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선진국들로부터 빌려오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자원, 자본 그리고 기술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후진국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경제를 건설하려면 그 성장방식이 오히려 불가피하게 대외의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 20世紀 後半의 産業化

18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産業革命은 수천년 동안 절대빈곤에 시달려 오기만 하던 인류에게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영국을 시작으로 하여 차례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들은 모두 오늘날 선진국으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으며 그 국민경제생활은 아직도 국민의 절대다수가 절대빈곤 속에서 허덕이는 많은 후진국들의 경제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게 영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의 성공사례가 영국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은 결코 아니다.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한 뒤 독일, 미국 및 프랑스 등이 잇달아 산업화하였고 19세기 말 러시아와 일본의 산업화를 끝으로 현대의 선진국권은 그 골격의 형성을 완료하였다. 그 이후 백년동안 이미 형성된 선진국권을 제외한 아시아-아프리카 및 남미 등의 지역에서 산업화에 성공하여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아직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완료되었다고 평가되는 시점인 1840년 영국과 독일의 1인당 GNP는 1960년 미국달러가격으로 각각 394달러와 267달러로 추계된다〔P. Bairoch(1976)〕. 반면에 1989년의 1인당 GNP로는 일본과 한국이 각각 23,463달러와 4,994달러를 기록하였다. 즉 선후진국간 1인당 GNP의 비율은 1840년에는 1.5 : 1이었으나 1989년 일본과 한국간의 같은 비율은 4.7 : 1에 이르고 있다. 전형적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1인당 GNP를 각각 1,500달러와 20,000달러로 잡으면 그 비율은 물경 13.3 : 1에 이른다. 이것은 그 동안 선후진국들간 經濟力 및 生活水準의 格差가 누적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뜻한다. 동시에 후진국이 산업화를 통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업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어려워졌음을 뜻하는 것

이다. 실제로 지난 세기말 러시아와 일본이 산업화된 것을 마지막으로 아시아-아프리카지역에서 그 뒤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후진국의 經濟開發展望과 方法에 대한 사람들의 視角은 크게 두 가지로 달리 형성되었다. 첫째, 후진국이 산업화를 통해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선진국들의 도움을 종전보다 더 절박하게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경제발전의 격차가 더욱더 커짐에 따라서 후진국 스스로의 힘만으로 산업화에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기 때문에 후진국의 경제개발은 선진국들과의 經濟協力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른 경제개발전략은 현실적으로 선진국의 경제협력을 매입할 수 있는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한 수출촉진정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20세기 후반 중진국권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과 대만의 성장전략이 바로 이러한 輸出主導型戰略이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지적 소유권의 재산권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되는 등, 선진국들이 제공하는 경제협력활동의 상품가치가 확대 인정되고 강화되는 쪽으로 세계경제질서가 개편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타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및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까지도 한국과 대만의 성공사례에 고무되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다.

둘째, 세계자본주의의 경제질서 속에서는 후진국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선진자본주의국가와 후진국간의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후진국의 선진화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같은 협력을 통해서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해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선진국권에 새로이 진입한 후진국이 하나도 없었음을 현실적 증거로 받아들인다. 從屬理論的 視角의 경제발전론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韓國經濟의 成長戰略은 선진국들과의 경제협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차관을 위주로 한 외자를 적극 도입하였고, 이와 더불어 기술도입의 노력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차관과 기술을 토대로 하여 시작된 공업화는 국내의 노동력이 수용할 수 있는 단순노동집약적 가공조립단계부터 착수하였다. 가공 및 조립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은 거의 전량 해외로부터 수입될 수밖에 없었는데 자원부존이 빈약하고 현대적 부품산업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못한 처지에서 이의 수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 결과 도입차관에 대한 원리금상환, 도입기술에 대한 기술료지급 및 원자재와 부품의 수입 등 선진국들과의 경제협력활동을 위한 外貨獲得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농림수산업, 광업 또는 써어비스업의 어느 부문에서도 이렇다 할 수출품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 공업화에 착수한 가공조립산업을 당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지 않고서는 달리 외화를 획득할 길이 전무하였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전통적 절대빈곤 속에서 위축될 대로 위축된 국내시장의 購買力만으로는 공업화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 가공조립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시장을 해외에서 찾아야 할 필요도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의 구매력이 충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외화획득의 길이 없었던 한국경제로서는 선진국들로부터의 경제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경제개발전략으로서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이 채택된 배경은 세부적으로는 물론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이 시기에 산업화를 시도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로부터의 경제협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외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펼쳐 왔다는 점이다. 즉 자본과 기술은 물론 원료와 제품판매까지 모든 것을 해외에 의존하는 방식을 통하여 성장을 추구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선진산업국들이 주도해 온 제국주의적 세계자본주의질서 속에서 일방적으로 수탈당해온 뼈아픈 경험을 가진 개도국의 지식인들이 이같이 두드러지게 外勢依存的인 成長戰略을 지극히 비판적으로 보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2.2. 資本從屬과 經濟剩餘流出

한국경제의 예속경제화를 거론할 때 가장 먼저 논의되어 온 문제가 바로 자본종속과 이로 말미암은 경제잉여의 해외유출문제이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개발도상국이 겪는 공통된 어려움의 한 가지는 사회간접자본, 에너지, 그리고 제조업설비투자에 필요한 자본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資本不足을 단시일내에 극복하려면 일단 어떠한 형태로든 외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내자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산업이 미발달한 등의 이유로 외화를 벌어들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의 첨단설비를 구입하려면 현물차관이나 외화차관 등 외자를 도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자를 도입하더라도 자본부족의 애로를 타개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외자도입이 바로 경제예속화로 직결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경제의 예속화에 따른 자본종속과 경제잉여유출문제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첫째, 국민경제의 총투자에서 外資가 점유하는 비중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만약 외자의 비중이 점점 증가해 왔다면 이것은 경제

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가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고 가중적으로 외자에 의존하도록 변해온 증거이므로 말 그대로 자본종속이 심화되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비록 초기의 성장이 외자에 의한 투자로 시작되었지만 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스스로 자본을 조달하는 능력이 강화되어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것을 자본종속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도입외자 가운데 直接投資와 借款의 비중이 변화해 온 모습을 살펴 볼 것이다.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자본주인 외국인이 투자기업의 경영에 개입함으로써 그 기업활동이 외국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마련이지만, 차관은 단순한 차입금이므로 그 사용은 전적으로 이것을 도입한 내국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입외자 가운데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자본종속의 강도는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째, 외자가 그 동안 누려온 收益率을 내자의 수익률과 비교함으로써 외자도입으로 인하여 그 동안 해외로 유출되어 간 剩餘의 크기가 적정한 것이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원래 외자는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외화로 된 자금이므로 내국통화로 이루어진 내자보다는 그 사용가치가 그만큼 더 높이 평가된다. 따라서 외자의 수익률은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자의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면 그것이 자본종속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좋을 것이다.

〈表 1〉은 1970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국내총투자와 대외투자의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대외투자의 국내총투자에 대한 비율은 投資財源의 外資依存率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表에서 보듯이 80년대 초반을 거친 이후부터 투자의 외자의존율은 추세적으로 낮아져 왔다. 1986년부터 실현된 국제수지의 흑자는 자본종속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고, 국제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선 1990년 이후에도 외자의존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결국 그 동안 이루어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적어도 스스로 필요한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동안 도입된 외자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자. 〈表 2〉는 到着基準으로 본 外國人投資 및 借款의 시계열 현황이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2년~1991년의 기간 동안 한국이 도입한 외자의 거의 대부분은 차관이며 직접투자는 전체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자본자유화의 추세에 따라서 정부가 80년대말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며, 1985년 이전에는 전기간에 걸쳐서 직접투자는 전체 외자의 10% 수준을 크게 밑도는 상태로 일관하였다. 결국 외

〈表 1〉 投資의 外資依存率(1970~1991) (단위 : 10억원, %)

년 도	국내총투자(A)	대외투자(B)	외자의존율(−B/A)
1970	690.6	−195.5	28.3
1971	862.3	−296.1	34.3
1972	893.8	−140.7	15.7
1973	1,376.6	−119.2	8.7
1974	2,451.2	−813.7	33.2
1975	2,956.3	−910.4	30.8
1976	3,772.7	−149.2	4.0
1977	5,159.9	24.5	−0.5
1978	8,041.0	−517.3	6.4
1979	11,277.7	−2,011.9	17.8
1980	12,071.3	−3,197.9	26.5
1981	13,993.5	−3,085.1	22.0
1982	15,562.9	−1,976.0	12.7
1983	18,360.8	−1,209.8	6.6
1984	21,666.2	−1,097.8	5.1
1985	23,673.1	−780.6	3.3
1986	26,485.8	4,020.5	−15.2
1987	31,944.3	8,008.7	−25.1
1988	39,211.2	10,210.0	−26.0
1989	47,693.2	3,342.5	−7.0
1990	63,816.7	−1,598.3	2.5
1991(P)	81,085.8	−6,456.4	8.0

資料 : 한국은행(1990), 『국민계정』, 통계청(1992), 『주요경제지표』.

자가 한국경제의 경영권까지 장악하고 외자의 이익만을 도모하도록 경제를 예속화시켰다는 견해의 타당성은 적어도 도입외자의 구성면에서는 성립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동차, 석유정제, 폴리에칠렌-BCM 및 트랜지스터산업 등이 초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시작한 뒤에 내국기업이 참가하여 이제는 내국기업이 주도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정착된 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이처럼 외국인투자산업에서조차도 그 산업의 운용이 외자의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우리 경제의 성장에는 별로 유익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는 매우 희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한국에 진출하였던 외자가 벌어간 수익과, 같은 기간 동안 내자가 벌어들인 수익을 비교함으로써 經濟剩餘의 流出程度를 평가해 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도입차관에 대한 이자율은 시기별로도 다르지만 같은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건별로 각각 조금씩 다른 것이 보통이다. 더우기 직접투자분의 수익률은 그때그때의 경기에 따라서 업종별로 크게 다르게 결정된다. 그러므로 외자전반의 수익률을 하나의 指標로 나타내는 방법이

〈表 2〉 外國人投資 및 借款導入 現況(到着基準)　(단위 : 백만달러, %)

년 도	차 관(A)	외국인투자(B)	외국인투자비율 (B/(A+B))
1962~1966	291	24	7.6
1967~1971	2,166	117	5.1
1972~1976	5,420	536	9.0
1977	1,879	143	7.1
1978	2,731	181	6.2
1979	2,668	195	6.8
1980	2,919	131	4.3
1981	2,937	152	4.9
1982	2,782	129	4.4
1983	2,467	122	4.7
1984	2,282	193	7.8
1985	1,988	236	10.6
1986	2,500	477	16.0
1987	2,667	626	19.0
1988	1,879	894	32.2
1989	1,332	812	37.9
1990	448	895	66.6
1991	429	1,175	73.2
계	39,785	7,038	15.0

資料 : 통계청(1987, 1992), 『주요경제지표』.

먼저 강구되어야 이러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제수지표의 장기자본수지통계로부터 차관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망라한 국내외자의 순잔고를 매년 계산한 다음, 매년 투자수익 순유출분을 그 전해 외자순잔고로 나눈 비율로써 외자 전반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기로 하였다. 다만 1960년말 현재의 외자순잔고는 0으로 간주하였는데, 50년대의 외자도입실적은 지극히 미미하므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투자수익 순유출분은 무역외수입 및 지급 통계의 투자수익 자료로부터 산출되었다. 물론 이렇게 산출한 외자순잔고와 투자수익 순유출분은 낮은 이자율의 공공차관부문까지 포함한 수치가 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외자의 수익률은 商業的 外資의 그것보다는 다소 낮게 결정될 것이다. 공공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도입차관의 절반 정도에 이르고 전체 도입외자의 약 1/4에 이름을 감안한다면 이 차이는 제법 클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통계자료상의 제약으로 공공차관부문만을 배제한 자료는 얻을 수가 없었다. 현실적으로 상업적 수익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이 본 연구의 지표보다도 다소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비교에 임하면 될 것이다. 다만 전체 외자가 한국경제로부터 벌어간 돈을 산정하는 데에는 비상업적 공공차관부문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을 것이다.

〈表 3〉 外資와 內資의 收益率 比較(1972~1991) (단위 : %)

년 도	외자의 수익률	국내회사채수익률	$화내자수익률	미국이자율
1972	2.1(5.6)	11.2(22.9)	—	6.0
1973	3.2(5.4)	18.5(21.8)	21.5	10.0
1974	−5.5(6.5)	−3.7(21.0)	−0.6	10.5
1975	−0.1(9.1)	−3.8(20.1)	20.1	7.25
1976	1.8(7.6)	5.0(20.4)	20.4	6.25
1977	1.2(7.7)	9.9(20.1)	20.1	7.75
1978	0.2(7.8)	6.7(21.1)	21.1	11.75
1979	−0.5(10.7)	8.5(26.7)	26.7	15.25
1980	3.2(16.7)	1.3(30.1)	−4.6	21.50
1981	10.2(20.6)	2.9(24.4)	17.2	15.75
1982	4.4(19.5)	10.2(17.3)	9.7	11.50
1983	12.5(15.8)	10.8(14.2)	7.5	11.0
1984	13.8(18.1)	11.8(14.1)	7.5	10.75
1985	13.2(16.7)	11.8(14.2)	6.1	9.50
1986	13.8(15.7)	10.1(12.8)	16.6	7.50
1987	9.0(12.7)	9.8(12.8)	22.6	8.75
1988	6.1(10.1)	7.4(14.5)	32.6	10.50
1989	1.8(6.6)	9.5(15.2)	16.0	10.50
1990	−0.1(5.3)	7.8(16.4)	10.4	—
1991	(5.4)	9.5(18.8)	11.9	—

資料 : 통계청(1991), 『주요해외경제지표』, 한국은행(1990), 『국민계정』, 한국은행, 『경제통계년보』 각년도, 『통화금융통계』 각년도.

내자 전반에 대한 수익률로는 은행의 공금리가 실세금리로부터 크게 괴리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會社債收益率을 사용하였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서는 국내 자본수익률로 가장 적합한 지표가 회사채수익률이라는 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회사채수익률은 자본의 상업적 수익률이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왜냐 하면 이와 마주 비교될 외자의 수익률은 비상업적 공공차관에 대한 수익률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옳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충분하게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회사채의 실질수익률은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이용하여 환산하였다. 회사채의 명목수익률은 별도로 괄호 속에 수록되어 있다. 외자의 수익률은 명목치와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로 환산한 실질치를 같이 수록하였다. 역시 명목수익률은 괄호 속에 수록해 두었다. 내자의 수익을 달러화로 환산해 보면 명목수익률만으로도 내외자간의 수익률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화내자수익률은 환율변동을 고려한 국내회사채의 달러화표시 명목수익률이다. 〈表 3〉은 이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70년대의 내자수익률은 외자의 수익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는 사실이다. 외자의 실질수익률은 1975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국내회사채실질수익률을 밑돌았고, 달러화표시수익률도 1974년 원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된 해를 제외하고는 내자가 외자를 크게 웃돌았다. 80년이후 86년까지는 다시 외자의 수익률이 내자의 그것을 웃돌았지만 원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해부터는 다시 내자의 수익률이 크게 높아졌다. 전체 기간에 대한 산술평균을 구해보면 외자와 내자의 실질수익률은 각각 5.0%와 8.1%로서 내자의 평균수익률이 단연 높다. 달러화표시 명목수익률을 보면 내자가 14.9%, 외자가 11.2%로 역시 내자의 벌이가 더 나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내자의 실질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72~79년 및 87~90년의 기간만을 관찰하면 외자의 평균수익률이 각각 0.3% 및 4.2%인 데 반하여 내자의 평균수익률은 각각 7.5% 및 8.6%로 월등하게 높다. 이에 비하여 외자의 실질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80~86년의 기간에는 외자의 평균수익률이 10.2%로서 내자의 8.4%보다 약간 높을 뿐이다. 외자의 수익률의 계산에는 저금리의 공공차관부문이 포함되어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외자의 수익률이 내자의 그것보다 두드러지게 높다는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자의 명목수익률은 미국의 이자율(여기에서는 프라임 레이트임)의 움직임과 비슷한 동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도입외자의 거의 대부분이 차관이고 그 이자율이 미국의 프라임 레이트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자본은 항상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지향하여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외자는 그 동안 한국시장에서나 미국시장에서나 비슷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그 동안 한국이 도입해온 외자는 내자가 벌어들인 것과 거의 같은 비율의 수익을 벌어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수익률은 매 시점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익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외자가 유독 한국으로부터만 높은 수익을 올려왔다든가, 내자보다 더욱 많은 돈을 벌어갔다든가 하는 주장의 경험적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절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가 외자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自體 資金調達能力이 신장된 결과 투자의 외자의존율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 동안 도입되어 온 외자도 차관이 대부분으로서 대부분 外資企業의 經營權은 내국인경영자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동안 외자가 벌어간 돈은 같은 자금이 다른 곳에서 벌 수 있었던 돈이나,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규모의 내자가 벌어

들인 돈보다 조금도 과다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한국경제가 외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자본종속의 정도가 강화되어 왔다는 주장의 현실적 근거는 대단히 박약한 것이다.

2.3. 技術從屬과 技術料支出

한국경제가 그 동안의 성장과정에서 선진국들에 크게 의존해 온 것 가운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기술이다. 제조업생산액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나마도 기술적으로 매우 낙후된 수준에서 지지부진하던 1960년대초의 한국경제를 짧은 기간 동안에 선진공업국으로 도약시키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産業技術力의 革新的 發展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던 당시와는 달리 선후진국간의 기술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지금 후진국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기술력의 혁신적 발전을 성취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후진국들이 단기간에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現實的 方法은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는 방법이다. 경제개발을 시도하는 후진국들이 선진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등 기술문제에 있어서 선진국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후진국간의 기술협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기술사용료가 과다하고,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지나친 制約條件을 부과하기 일쑤이며, 기술적 종속의 관계를 악용한 산업지배의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정일용(1987)]. 한마디로 말하여 후진국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면서 그 댓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지불하도록 강요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적 소유권의 개념이 확대강화되면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점점 더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0년대초를 전후한 시기의 한국경제는 진공관 라디오와 '시발'자동차를 겨우 조립하는 정도의 기술력밖에 가지지 못하였으나, 30여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반도체칩과 자동차엔진과 같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까지도 스스로 생산해내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물론 우리가 아직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첨단기술이 훨씬 더 많고, 우리 기술력의 전반적 수준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크게 뒤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의 기술수준을 거의 無와 다름없던 30여년 전의 그것과 비교할 때 그 동안 기술발전에서 이루어진 성취가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임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이만큼의 기술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경제가 그 동안 선진국들에게 지불해 온 기술협력에 대한 댓가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후진국측이 원하지 않는 데 이루어지는 기술협력관계는 없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선진국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키는 일은 종종 있다.

〈表 4〉 國民總生產中 技術料支給과 硏究開發費支出　　(단위 : %)

년도	한 국	연 구 개 발 비 지 출				
		한 국	미 국	일 본	서 독	프 랑 스
1965	—	0.26	—	—	—	—
1970	—	0.38	—	—	—	—
1975	—	0.42	—	—	—	—
1976	—	0.44	—	—	—	—
1977	—	0.61	—	—	—	—
1978	0.16	0.64	—	—	—	—
1979	(77~81)	0.57	—	—	—	—
1980	—	0.58	—	—	—	—
1981	—	0.64	—	—	—	—
1982	0.16	0.88	2.50	2.16	2.72	2.10
1983	0.19	1.01	2.56	2.29	2.75	2.15
1984	0.25	1.19	2.59	2.37	2.75	2.23
1985	0.33	1.48	2.69	2.53	2.83	2.32
1986	0.40	1.68	2.73	2.51	—	—
1987	0.41	1.77	—	—	—	—
1988	0.39	1.86	—	—	—	—
1989	0.42	1.91	—	—	—	—
1990	0.45	—	—	—	—	—

資料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1988),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1991), 『1990년도 기술도입년차보고(1991.5)』, 통계청(1992), 『주요경제지표』, 경제기획원(1990), 『한국사회지표』.

그러나 이러한 일은 기술시장이 기본적으로 販賣者市場(seller's market)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기술시장에서 선진국들은 독점공급자의 위치를 누리고 있으며, 이들의 횡포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고안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오히려 요즈음 전개되고 있는 지적소유권의 강화 움직임은 선진국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더욱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도입을 원하는 후진국으로서는 선진국측의 여러 가지 요구를 수용하고라도 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것을 도입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도입하지 않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절에서는 그 동안 우리 경제가 외국에 지불한 기술료가 과연 과다한 것이었는가에 대하여 수량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賦課된 制約과 기술협력의 내용상 불가피하게 수용하여야 하는 經營權侵害에 隨伴된 費用을 계산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술료의 명목으로 직접 지불된 금액의 크기만을 고찰하고 그 과다성 여부를 판정해 보기로 한다. 〈表 4〉는 우리 나라가 그 동안 대외적으로 지출한 기술사용료의 크기가 매년 국민총생산에서 점하는 비율과 우리 나라와 미국, 일본, 서독 및 프

랑스의 연구개발비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몇개 연도에 대하여 요약한 것이다. 表의 자료에서 한국의 경우 연구개발비지출은 대외적 기술사용료지출을 포함한 수치로 처리되어 있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대외적 기술사용료지출은 국민총생산의 0.5%를 밑돌고 있으며, 지적 소유권의 개념이 강화되면서 기술사용료의 부담이 늘어난 최근에도 0.45%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기술사용료지출을 포함한 연구개발비지출은 1986년 현재의 시점에서 1.82%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2%의 수준을 훨씬 윗도는 선진국들에 비하여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

원래 60년대초의 한국경제는 스스로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리 만큼 그 기술력이 빈약하였고 기초기반기술에서부터 산업생산기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적으로 도입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기술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은 주로 기술도입 활동을 중심으로하여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導入技術을 消化吸收하는 성과가 누적되면서 스스로 연구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능력도 축적되어 왔으나, 국내의 연구개발기술력은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하여 크게 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1965년도의 연구개발투자는 GNP대비 0.26%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투자재원이 부족하였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研究開發活動을 遂行해낼 能力이 모자랐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어찌하였든 그 동안 한국경제는 자신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데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과시하는 고도성장을 유지하여 왔던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 동안 대외적으로 지불하여 온 기술사용료의 GNP대비율이 가령 3%를 윗도는 수준이었다면 이것이 과다하였다는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表에서 보듯이 이 비율이 0.5%를 밑도는 수준으로 일관해 온 경우에는 기술사용료의 지급이 과다하다고 주장할 근거는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으로서는 技術從屬의 문제를 결코 모면할 수가 없다. 기본적 기술을 선진국들로부터 배우지 않고서는 경제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국제기술시장이 몇몇 선진국들에 의하여 독과점되어 있고 이들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시기에 부담스러운 댓가지불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진국들과의 기술협력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닐 것이다. 기술종속의 문제는 기술사용료등 그 댓가의 과다함에서 인식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과다하게 지불한 댓가를 보상받고도 남는 성과를 과연 거두고 있는가라는 시각에서 고찰되어야 할 문제이다.

2.4. 맺는 말

한국경제의 대외적 예속성을 평가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작업만으로 그 해답이 구해지지 못할 만큼 방대한 연구과제이다. 본 장에서는 20세기 후반의 산업화가 先進國들의 積極的인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한 다음 韓國經濟의 資本從屬과 技術從屬의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한국경제는 외자에 크게 의존하면서 경제개발을 시작하였으나 성장의 과정에서 자체적 자본조달능력을 배양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투자재원의 외자의존율을 두드러지게 낮추어 왔다. 외자의 구성은 대체로 직접투자가 아닌 단순외채로서 외자에 의한 경영권장악을 우려할 상태도 아니다. 외자가 특히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 갔다든지, 또는 국내자본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갔다든지 하는 견해의 현실적 근거는 박약해 보인다. 기술료 지출이 과다하였다는 견해는 그 기본적 시각에 문제가 있다. 국제기술시장에서 선진국들의 독과점적 행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기본적인 기술종속은 불가피한 것이고, 이에 대한 평가는 기술료의 과다여부보다는 기술료를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그 동안의 기술협력에서 거둔 성과는 그 동안의 고도성장만으로도 대외적으로 지불해온 기술료보다 더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가 그 동안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자본종속과 기술종속이 심화된 결과 선진국들에게 더욱 예속되는 길을 걸어왔다는 견해는 현실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相對的 窮乏化의 問題

예속화의 논쟁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비판은 상대적 궁핍화의 주장이다. 이 주장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비록 한국경제가 성장하여 큰 경제잉여를 창출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이것이 극히 일부의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감으로써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一般庶民大衆들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더욱 窮乏化되는 길을 걸어왔다고 지적한다[박현채(1985, 1987)].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같은 극단적 주장을 구태여 전개하지 않는 학자들 가운데에도 한국의 경제성장을 기본적으로 不均衡成長으로 보는 시각은 대단히 보편적이다[예컨대 이학용 외(1990) 참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한국경제가 성장을 얻기 위하여 分配構造가 惡化되는 비용을 감수하여 왔다는 것이다[이학용 외(1990)].

한국의 소득 또는 부의 분배구조가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왜곡되어왔다는 설명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지적한다. 첫째,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정부는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을 증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各種 誘因政策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금융세제상의 특혜는 물론 각종 인허가상의 특혜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제조업을 일으키고 수출을 늘려나갈 한정된 숫자의 유능한 기업인들에게 온갖 政策的 支援을 집중해 왔던 것이다. 사실 이들 기업인들은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성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과 축적한 부가 국민적 희생을 토대로 제공된 정책적 지원 아래 얻어진 것인 만큼 이들의 분배상 점유율은 정도 이상으로 높아졌을 터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지적이다. 둘째, 관료가 경제의 운영에 깊이 개입하여 특혜성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시 못할 규모의 뇌물이 오가는 등 不正不敗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공개된 바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점 또한 서민대중의 상대적 궁핍화를 초래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제한된 정보와 자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기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임으로써 막대한 不勞所得을 거두어들인 점이다. 이 점 또한 정보와 자금으로부터 소외된 서민 대중들의 상대적 궁핍화를 촉진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는 단순한 주장으로 그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 증거는 아직까지 제시된 바 없는 상태이다. 몇몇 연구가 지니계수 등 所得分配指標를 시계열적으로 조사하고 한국의 소득분배구조는 성장과정에서 결코 악화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Adelman and Robinson(1978), 주학중(1979)〕.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숫자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이준구(1988)〕.

본 연구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의 소득이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가를 발표된 통계자료로부터 살핀 다음 이를 분석하여 상대적 궁핍화론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통계자료는 명목임금지수의 시계열자료, 1인당 명목 GNP의 시계열자료 및 농가명목소득지수의 시계열자료이다. 과거의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임금이 1인당 GNP보다 더 크게 올랐다면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궁핍해졌다는 주장의 설득력은 약해질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강해질 것이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1972년을 시발점으로 잡고 이 때의 임금, 농가소득 및 1인당 GNP를 모두 같이 100으로 잡았다.

〈表 5〉는 이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1990년 현재 1인당 GNP는 3,198.4인 데 비하여 전

〈表 5〉 賃金, 農家所得 및 1人當 GNP의 時系列的 推移

년 도	전산업 명목임금지수	제조업 명목임금지수	1인당 명목 GNP	농가 명목소득지수
1972	100	100	100	100
1973	111.5	118.0	126.0	111.9
1974	147.1	159.7	175.1	157.1
1975	190.5	202.8	229.7	203.3
1976	258.1	273.1	310.3	269.3
1977	340.9	365.4	391.0	333.7
1978	460.2	490.8	519.1	438.8
1979	590.5	631.1	656.1	518.7
1980	728.6	774.4	770.7	627.2
1981	879.5	930.1	940.0	858.8
1982	1,018.4	1,066.8	1,060.9	1,039.9
1983	1,130.4	1,196.9	1,236.5	1,194.3
1984	1,228.8	1,293.9	1,386.8	1,292.3
1985	1,340.6	1,422.0	1,530.0	1,335.9
1986	1,450.5	1,552.8	1,758.9	1,396.1
1987	1,598.0	1,733.4	2,039.0	1,522.0
1988	1,844.7	2,073.3	2,404.4	1,893.3
1989	2,234.8	2,592.3	2,675.1	2,197.7
1990	2,655.7	3,115.6	3,198.4	2,567.7
1991	3,119.6	3,640.3	3,807.1(p)	—

資料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1992), 『주요경제지표』, 경제기획원(1990), 『한국사회지표』.

산업임금은 2,655.7이고 농가소득은 2,567.7에 그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평균적인 勤勞所得과 農家所得의 성장정도는 모두 1인당국민총생산의 성장정도에 확실히 못 미치고 있다. 이 결과는 고도성장의 결실이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분배된 대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에게 더 많이 배정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노동자와 농민들의 절대적 소득수준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인구와 비교할 때 相對的 貧乏은 성장의 결과 오히려 더 심화되었던 것이다.

表에 나타난 지수의 차이에 더하여 노동자, 농민 및 그 가족들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한 나머지 소수인구의 소득수준이 엄청나게 증가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상으로 나타난 한국의 소득분배구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혀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원래 지니계수를 산출하는 데 이용되는 통계자료는 국민소득자료가 아니라 표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이다. 그러므로 이 자료에 포함된 소득정보는 의부에 공개되어도 무방한 소득에 국한된다. 뇌물이나 투기를 통하여

습득한 소득은 지니계수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에 위 表에 수록된 1인당 GNP 자료는 국민소득통계로부터 작성된 자료로서 그 해 생산액은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고, 임금 및 농가소득지수는 지니계수자료와는 달리 하향평가시킬 유인이 전혀 없는 자료이다. 그러므로 지니계수에 의한 연구에서 포착되지 않은 위의 몇 가지 분배결정요인이 우리의 조사에서는 포착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表에서 눈길을 끄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제조업부문의 임금은 역시 못미치기는 하지만 1인당 GNP에 상당히 근접한 율로 성장하여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난 몇년 동안 격심하였던 생산직근로자들의 쟁의활동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表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부문의 임금수준은 1986년 이후부터 급속한 상승세를 보여왔던 것이다.

4. 結 論

지금까지 우리는 제한된 범위 이내에서나마 韓國經濟의 隷屬化 및 相對的 窮乏化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예속화 현상에 대한 현실적 근거는 매우 박약하지만 상대적 궁핍화에 대한 현실적 증거는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부산물로 불러왔다고 하는 견해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년 동안 제조업체들이 겪어온 격심한 노사분규는 국민경제적 부담이었다고 지적되었으나 분배구조의 개선에는 확실히 효과적인 것으로 들어났다. 성장의 과정에서 분배구조의 악화가 분명히 진행되어 왔던 만큼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로 줄이면서 이것을 效果的으로 是正할 수 있는 方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敎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 : (02)880-6369
팩시 : (02)888-5434

參 考 文 獻

박현채(1985): "현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 (Ⅰ)," 『창작과 비평』 57, 창작과 비평사.

_____(1987): "한국경제의 과제와 전망," 정윤형 외, 『한국경제론』, 까치.

이대근(1985):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에 관하여," 『창작과 비평』 57, 창작과 비평사.

이준구(1992):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이학용 외(1990): 『한국자본주의의 현상과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정일용(1987): "외자도입과 한국경제," 임원택 외, 『한국경제의 이해』, 비봉출판사.

주학중(1979): "계층별 소득분포의 추계와 변동요인," 『한국개발연구』 22. 43.

Adelman, I., and S. Robinson(1978): *Income Distribution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A Case Study of Korea*,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Bairoch, P.(1976): *The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5, 2.